

# “협상하자” vs “강력투쟁”...패트정국 대치 격화

### 민주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 압박...나경원 북미회담 발언 비난 한국당, 정치투쟁·저지투쟁 병행... '3대 친문 게이트' 공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병원에 실려 가면서 여야의 대치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황 대표의 단식이 일단 중단된 것을 계기로 유연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방침을 내세운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오히려 저지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요청한 것을 맹비난하고 나섰고, 한국당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검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허명수사 의혹 등을 부각시키며 대어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단식 투쟁을 하던 황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거론한 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공수처 신설이 동의만 한다면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갈 것”이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한국당을 포함하는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공세를 펼쳤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혁신특위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어떻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남북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는 한반도 평화까지 위협할 수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

공수처를 저지하는 실질적인 투쟁을 함께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협상 요구에는 ‘선(先) 불법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맞섰다.

또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 무마 의혹,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허명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을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당내에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도 구성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포함한 군소야당 간의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선거제 수정안이 논의하는 것을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나눠먹기 야합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비례성을 강화한다면 힘으로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지역구 의석을 도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야합을 벌이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선거법 협상에 착수한 군소야당도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4당 합의 정치·사법 개혁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비상행동선포식’을 개최했다. 민주당화당은 국회 본정계단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위원장(맨 왼쪽·더불어민주당)이 입장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선거법개정안 진통 속 의원정수 확대 카드 재부상

‘253 대 63’ 안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가면서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정수 확대 카드가 다시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단,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한 현행 패스트트랙 안(案) 보다 지역구 의석 수 축소 규모를 줄인 ‘240 대 60’, ‘250 대 50’ 안이 현실성 높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때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드는 만큼 연동 비율을 현재의 50%이 아닌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소정당은 비례성을 높일 수 있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1·2당 이 비례대표를 낼 수 없는 제도”라고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처럼 수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 카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국회 예산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의석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253 대 63’ 안과 함께 의원정수를 10% 늘리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국 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민주당이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는 어렵다고 난색을 보여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연동률을 50%로 하고 의석 수를 한 자릿 수 정도 늘이는 방안도 막판 거론될 가능성에 크다”고 말했다.

## 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증감액 심사 재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가 28일 오후부터 재개됐다. ‘소(小)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예결위는 지난 22일 오후부터 공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3당 간사 협의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3당 간사들은 협의체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회의 운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만 남기기로 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 일시와 장소, 시작 시간 등만 기록으로 남긴다”며 “회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예결위 활동 시한은 11월 30일로,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주어진 시간은 3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올해 예산안 심사 역시 ‘밀실·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총선 앞두고 청와대발 잇단 악재에 민주당 ‘술렁’

### 김기현 의혹·유재수 검찰 무마 의혹 등 파장 예의 주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터지고 있는 청와대발 악재에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다. 황윤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허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검찰 무마 의혹 등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사태가 간단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일단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조국 사

태가 겨우 진정된 상황에서 또다시 총선에 영향을 미칠 대형 악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루설 등이 나오는 김기현 전 시장 수사 관련 의혹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8일 기자들을 만나 “언론보도만 나왔지 검찰이 어떤 법적 책임이나 문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도 아니다”라며 “또 김 전 시장 수사는 첩보이 첩 전부터 이미 이뤄졌다”고 말했다.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유 전 부시장 개인 비리’라고 선을 긋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역기’ 위해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중단된 것인지 청와대에서 마무리한 것인지가 쟁점인데, 민정수석실은 정상적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유 전 부시장 개인 비리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

령 주치의 출신인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이 ‘친문’(친문재인) 실세들과 가까워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 특혜대출을 받았다고 야당이 공세를 퍼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대출이 이전 정권 시절 이뤄진 것이고 불법 자금이 오간 것도 아니다”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잇달아 나오는 이번 의혹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내년 총선에 상당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모 의원은 “이번 사안들은 오래전부터 흘러나오던 얘기”라며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나오고 있으며 간단히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백원우 부원장, 의혹 부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법무부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 부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며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 부원장은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백 부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 받은 바조차 없다”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며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 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며 수습된 첩보이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기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김 전 시장에 대해 이른바 ‘허명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청와대 검찰반 총괄인 박형철 법무부비서관에게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정신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b>총 계</b>	<b>28</b>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대학원 0621 605-1115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응원함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통계학과(D.C.S.)	5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석사통합	신학과(Th.M.)	20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 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